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2.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6월 첫째 주 정세동향

2010년 6월 3일 목요일

01	세계경제	유럽금융안정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와 전망
03	세계정세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 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선단 공격
06	한국경제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전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08	한국정세	6.2 지방선거 결과 브리핑
17	노동	총연맹 금속노조 - 금속노조 9일, 11일 경고파업 - 경주 발레오전장코리아 금속노조 탈퇴 및 경주시부 3시간 파업, 법원효력판결 무시 - 금속노조 1백61곳 4만2천명 쟁의조정 신청 - 올해 임단협 개악안, 사측도발 공공 - 부산지하철노조 쟁위행위 가결 - 동덕여대 청소미화노동자 집단 해고 - 운수노조 철도본부 찬반투표 가결 5차 국가고용 전략회의
23	여성	없음

■ 세계경제

1.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출처: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 제2010-21호 / 2010. 5. 16-5. 22

- 그리스에 대한 구체적 구제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된 것은 금년 5월 2일. 유로회원국(800억 유로)과 IMF(300억 유로)가 공동으로 3년간 1,100억 유로를 지원. 유로회원국은 시장금리(현 5% 내외)로, IMF는 대기성차관금리(2~3%)로 지원하되 재정긴축 등 강력한 지원조건(conditionality)을 부과. 이러한 지원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스페인 등 주변국가도 재정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은 계속 불안. 지원안 발표후 1주일간(5.2.~5.7.) 유

로화 환율은 4.1% 절하되고 유럽 주가는 11.2% 급락.

- 이처럼 시장불안이 계속되자 5월 10일 EU 재무장관들은 EU 정상회담(5.7일)에서 합의한 7,500억 유로(IMF의 2,500억유로 지원 포함) 규모의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조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 사상 최대규모의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 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

1)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주요 내용

-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은 ① 5,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지원(IMF 2,500억 유로 별도 지원), 강력한 재정긴축 요구, ③ ECB의 국채 및 회사채 매입 등 3개축(three pillars)으로 구성.

- 5,000억유로의 구제금융지원: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4,400억 유로를 회원국에 지원 하되 SPV의 대출재원은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고 회원국이 지급을 보증. 각 회원국의 보증규모는 ECB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 또한 기존 '국제수지 안정기금' 의 재원을 600억 유로 증액(500억 유로 → 1,100억 유로)하여 회원국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을 종전 11개 비유로국가에서 27개 EU 전체 회원국으로 확대. 지원자금은 EU 예산을 담보로 금융시장에서 EC채권을 발행하여 조달.

- ECB의 국채 및 회사채 매입: ECB는 회원국의 국채와 회사채를 매입하는 '증권시장 프로그램' (Securities Markets Program)을 실시. (5.10.-24. 중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국채를 265억 유로 매입.)

2) 유럽금융안정메커니즘의 문제점

① 각국의 경제구조개선 촉구 내용 결여.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원론적 수준에 불과. 그러나 회원국들이 경제구조 및 체질 개선 노력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

②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부담은 여전. 안정메커니즘을 통해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환불이행 위험은 방지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금 대여주체만 달라졌을 뿐 위기국의 채무상환부담은 그대로 존속. SPV의 대출금리는 SPV 발행채의 신용등급, 시장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조건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음. 그리스 및 아일랜드는 안정메커니즘 종료 이후 3년 동안(2013~2015년)의 국채상환규모가 안정메커니즘 시행기간 중(2010~2012년)보다 더 많아 안정메커니즘의 유효성이 반감. 또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보증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위기국의 채무부담이 늘어날 우려.

③ SPV 운영방식에 대한 불확실성: 현재 SPV의 운영주체, 자금조달방식, 수혜조건, 지원규모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음. SPV에 대한 지급보증은 국제수지 안정기금과 같은 공동보증이 아니라 개별보증이기 때문에 자금 수혜국이 SPV 채무를 보증하게 될 경우 보증 가치가 감소될 우려. 신용평가사들이 손실률을 감안하여 SPV 발행채권의 신용등급을 회원국중 가장 낮은 국가신용등급(예 : 그리스 BB+)에 준하여 부여할 경우 SPV 발행채가 투기등급이 될 수 있음. 한편 SPV 보증은 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내사정으로 의회 승인이 지연될 경우 회원국 지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 (벨기에, 아일랜드의 경우 그리스 지원에 대한 의회승인이 지금까지 지연.) 아울러 헌법상 다른 나라의 국채발행에 보증을 설 수 없는 국가(예: 독일)의 경우 SPV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

④ 재정긴축 이행의 어려움 및 과도한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 가능성. 임금삭감, 연금동결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 등으로 재정긴축의 이행이 불확실. 또한 단기간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이행계획의 실현 여부가 불확실. 한편 각국이 재정긴축방안을 예정대로 실행한다 하더라도 동시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로 세수가 감소할 경우 재정상황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음.

■ 국제정세

1.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5/24~25)

1) 미·중 전략 경제 대화 의견접근... G2 무역 갈등 풀릴까
 위안화 절상 등 핵심쟁점은 여전히 이견... 대북 제재도 논의 (한국경제, 2010.5.28)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과 중국의 정부 조달 정책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 유엔의 대북 제재와 이란 핵 문제, 위안화 절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

① 에너지개발 합의

미·중 양국은 녹색협력 파트너 계획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비롯해 양국 세관 간 협력, 에너지 분야 부처 간 협력, 양국 수출입은행 간 융자 및 결제 협력, 의료설비 용자 프로젝트 및 환경보호형 전선설비 협력, AP1000 원자로 건설 분야 협력, 전염병 예방 등의 분야에서 모두 8건의 양해각서 및 협정에 서명. 양국이 실제로 협력을 강화하는 분야는 총 26개에 달함. 양국은 덜 민감한 분야인 에너지와 환경, 투자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기로.

② 무역문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보다는 무역장벽 등의 문제였다. 미 무역적자는 2009년 2268억 달러로 2008년의 2680억 달러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더 조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 해제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보호무역주의 타파에 협상의 초점을 맞췄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한 단계 개선하려면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이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회담에서 '종료 시간표' 제출을 요구했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앞서 미 행정부가 올해 중반에 대중 첨단기술 판매 검토 보고를 마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이 조치가 완화될 것임을 시사.

미국은 중국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며 정부 주관 조달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③ 위안화 환율 등 민감한 문제는 뒤로

경제분야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였던 위안화 환율 문제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문제 역시 논의를 미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폐막 회견에서 "재정 및 무역이슈와 관련해선 진전을 이뤘으나 골치 아픈 이슈인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는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

후 주석은 개막식에서 이와 관련, "주동적이고 통제적이라 원칙 아래서 위안화의 환율 결정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말해 환율은 중국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

④ 천안함 사태

다이빙귀 국무위원: 미·중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폐막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천안함 사태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과 협력할 것",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클린턴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의 천안함 사태 회부를 제안하면서 중국과 협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중국이 천안함 사태의 안보리 회부에 호응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음.

2) 자기 목소리 낸 中, 눈치만 보다 온 美, WSJ "전략경제대화서 중국에 끌려다녔다" 평가
 미국도 중국에 쫓겨났다. (한국일보, 2010.5.27.)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5/25 보도: 중국 베이징에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제2차 미중 전략·경제 대화는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자리매김한 양국 간 역학관계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미국은 에너지, 환경 등에서 합의문을 이끌어 내면서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지만, 천안함 사태, 이란 핵 문제, 위안화 절상 등 주요 이슈에서 중국 측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

주요 핵심 의제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지 못하고 끌려갔다는 것이 WSJ을 비롯한 대체적 평가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던 위안화 환율절상 문제에 대해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 대표단은 유럽 재정 위기로 수출에 타격을 입은 중국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환율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며,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선언하겠다"는 미 의회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

천안함, 이란 핵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 및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를 놓고도 중국은 미국의 주장을 외면. 북한 어뢰로 침몰한 천안함 문제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만 밝힌 채 북한 제재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이란에 대한 유엔차원의 제재와 관련해선 중국은 이란과의 교역·우호 관계를 고려해 동참에 난색을 표함.

3) 중국과 '친구끊기(defriend)' 를 할 시간

*출처: Elizabeth Economy, Adam Segal, <Foreign Policy>, 2010.5.24.

G2는 처음 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인 버그스테인이 미중 간 국제 경제적 사안에 대한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 제안했던 것.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자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희망은 사그라들었다. 오바마 집권 1년 동안 미중간의 이해관계, 가치, 능력의 차이로 인해 미중은 국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협력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명확하게 드러났다.

필요한 것은 큰 틀에서의 합의인데 그동안 미중간의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은 단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였다; 환경 파트너십, 전기자동차 기준에 대한 협력,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이런 것들이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좁은 범위의 합의를 얻자고 12명 이상의 미 장관들이 중국까지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진전은 기간의 미중대화의 밖에서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이 코펜하겐 기후회의에서 존전의 협상내용이었던 탄소배출기준과 국제 기금지원 건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결정은 미국보다도 개발도상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또 중국의 자국기업의 정부지원 폐지에 대한 긍정적 고려를 이끌어낸 것도 단지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의 결과였다.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지지하겠다는 최근의 결정도 러시아가 이전의 중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이었다.

오바마 정부는 그동안 미중전략경제대화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대화를 유지하길 원하겠지만, 미중 간 사안은 너무 중대하고, 정책결정자들의 시간과 인내는 제한되어 있다. 일부는 미중전략경제대화를 해산시키자고 제안한다. 미중 간 모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수많은 장관들이 가서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사안 별로 전략적 이해관계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미중전략경제대화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사안별 대화는 각기 다른 책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사안별로 접근했을 때 미중 간 공통의 이해를 찾는 것이 더 쉽다.

중국과의 대화가 어려운 것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 또한 무역, 기후변화, 사이버 상 갈등문제, 달라이 라마 등에 대해 중국과의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외의 나머지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데 시간과 힘을 쏟는 것이 진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G2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에 진정한 진전이 가능하려면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G2의 교훈이다.

국제분쟁지역 리포트

1. 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선박 공격

;이스라엘이 31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해 최소 10명 이상의 민간인 숨짐. 구호품을 수송하던 민간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자유 가자운동’ 등 친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주도로 약 1만명의 구호물품과 터키, 그리스 등 40개국 600여명의 인권활동가 등을 실은 6척의 구호선박들에 대해 이날 새벽 5시경 가자지구 해안에서 약 13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전격 공격을 감행. 특수부대원들은 헬기에서 래펠을 이용해 갑판에 내린 뒤 저항하던 활동가들에 대해 무차별 진압. 이스라엘 정부는 10명 이상의 활동가들이 숨졌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 언론들은 1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 그동안 ‘자유 가자운동’ 등이 이스라엘이 봉쇄한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전달하겠다고 밝히자, 이스라엘은 “도발행위”라며 경고해.

이번 사건은 미국의 중재를 통한 간접 중동평화회담에 악재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것. 공해상에서 이스라엘군의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철저한 조사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유엔안보리는 자국민 9명이 사망한 비상임이사국 터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긴급이사회를 소집. 아랍연맹도 회원국 22개국 긴급회의를 1일 카이로에서 열기로.

;1일 새벽(현지시각)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최소 민간인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런 행동”을 비난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힘. 비난 성명의 수위를 높고는 줄다리기가 벌어져, 애초 터키와 파키스탄, 아랍국가들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이 채택. 이스라엘 외무부는 1일 “유엔 안보리 성명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동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지도 않는다.”고 반박.

이스라엘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하고 중동 평화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이 확실. 온건 이슬람 국가인 터키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반대하며 이스라엘과 유대를 맺어왔지만, 이번 안보리 비난성명 채택 과정은 터키가 주도. 당장 터키는 이스라엘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자국 대사를 소환. 미국의 중재로 18개월 만에 최근 재개된 간접 중동평화협상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 하마스는 격분한 아랍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입지가 강화.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 악화도 깊어지게 됐다. 두 나라는 평화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정착촌 강행으로 관계가 크게 틀어진 상태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워낙 거세, 미국이 기존처럼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기도 힘든 상황.

;이스라엘군의 가자 구호선박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31일(현지시간)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사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3500여 명의 시위대원들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에 자유를'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 터키와 이라크, 이집트를 넘어 세계 각국의 분노를 일으킴. 터키 총리는 "이스라엘군의 가자 구호선박 공격은 국가테러리즘"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집트 전역에서는 8000여 명의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대사를 카이로에서 추방하고 이집트와 가자 사이의 라파 국경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 프랑스 파리에 서도 2000여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과 터키의 국기를 흔들며 돌을 투척하는 등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 이 밖에도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도시들에서도 소규모 시위. 스웨덴 경찰에 따르면, 5000여 명의 시위.

■ 한국경제

1.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와 전망

* 출처: 대신경제연구소 경제논평 2010년 5월 31일

1) 원/달러 환율 급등

-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며 지난 4/26일에는 연중 최저점인 1,104.1원 수준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5월 들어 남유럽 발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하였으며, 세계증시 하락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주식순매도세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로 반전하였다. 천안함 결과 발표일(5/24일)과 다음날에는 원/달러 환율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1,253.3원까지 상승하였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4/26일 이후 불과 20여 거래일 만에 무려 150여 원이나 폭등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외환시장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이 되자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되었던 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이 단행되었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다소 진정되면서 달러 당 원화환율은 다시 급락세로 반전해 지난 주말 1,194.9원으로 거래를 마감하였다.

2) 국내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 반복

- 최근 주요국 통화의 미 달러화 대비 가치 변동을 살펴보면 원화가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강화로 나타나는 미 달러화의 강세를 인정하더라도 주요국 통화에 비해 원화가치 하락이 지나치다. 원/달러 환율이 최저점을 기록한 4/26일을 기준으로 5/26일 현재 각국의 통화가치 하락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원화가치 하락률은 13.5%를 기록하여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화(-8.2%)는 물론 스위스 프랑(-7.9%), 영국 파운드화(-6.8%)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3)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천안함 사태발표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었다는 점으로 일정 부분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유독 원화가치 하락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취약성.

-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중 외환거래금액은 달러 현물환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때 50억 달러 밑으로 하락했었으며 이후 회복이 되었다고는 하나 100억 달러 내외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기로 규모가 축소된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국내 명목 GDP(8,329억 달러)나 수출입 규모(통관기준 6,866억 달러)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을 포함한 은행부문의 채무는 단기채무 비중이 장기채무 비중보다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거나 일시적인 외화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들어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외국인 주식자금은 남유럽 발 재정위기 악화로 인해 주로 유럽계 주식자금이 대거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올 들어 외국인은 양호한 국내경제기초여건과 원화강세를 예상하여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올 들어 5/26일 현재까지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순매수 금액은 원화기준으로 39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의 상당한 하락압력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5월 들어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에서도 외국인 주식자금이 6조원 이상 해외로 순 유출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급등 및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은 여전히 순유입을 기록 중이다.)

- 이외에도 역외 선물환 시장에서의 투기세력의 움직임이 국내 외환시장의 현물환 시세를 좌지우지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외환시장 규제의 필요성 대두

- 이와 같이 외부충격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외환시장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외환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규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대표적으로 은행 선물환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즉 은행의 선물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단기외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미 수출기업들은 선물환 거래를 실물거래의 125%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은행에 대해서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 이외에도 외화자산 대비 외화대출 비율을 억제하는 외채 총량 규제, 외국인의 자본거래에 대한 자본거래세 부과(일명 토빈세), 통화스와프 확대 등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6월 4일과 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급격한 외환유출로 인한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기경보제도(EWS) 등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2010년 5월호

-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는 한국과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북한과 이들 나라와의 교역 규모를 합치면 그것은 북한 대외거래의 최대 80% 이상, GDP의 최대 3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거래의 20~38% 정도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7~18억 달러 수준이다. 우리의 제재가 실행될 경우,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GDP의 13% 정도)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바, 남북교역 중단 시 북중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07년의 경우 전략물자인 석유수입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5.3억 달러였는데, 같은 해 북한이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 역시 실질교역흑자(5억달러), 금강산 입산료(2천만달러), 개성공단 임금(1,400만달러) 등 5.3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200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감소하였는데, 여기에는 2008년 이후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달러의 규모가 감소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둘째, 북한은 그간 한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북중무역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교역 상품구조를 볼 때 이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그간 한국으로 수출하던 주요 제품들 가운데 상당수가 모래, (송이)버섯, 수산물, 농산품과 같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거나 또는 중국이 오히려 수출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셋째, 남북교역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와 같은 북한무역의 부정적 요인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바, 남북교역 중단 시 이를 타국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제재에 따른 북한의 대일수출 중단 피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70% 정도가 (교역구조가 유사한) 남북교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관찰된다.

-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북제재를 실행할 경우 북한에게는 “남북교역 중단 → 한국으로부터의 경화 수입 중단 → 대중결제수단 부족 → 대중수입능력 약화 → 북중무역 정체 → 타국가로의 거래이전 애로 → 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 현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북한은 장기적으로 교역구조를 전면 재편하여 우리의 제재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겠지만, 현재 북한경제가 단기적인 충격에도 상당히 고통을 받는 취약체질이라는 것이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 우리의 제재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선택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제재에 중립적인 경우 둘째,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 및 역할을 감안하여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경우 셋째,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여 오히려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만일 중국이 우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이를 계기로 북한

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반면, 우리의 대북제재에 직면하여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의 대북제재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경제의 대중국 종속성이 전면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둘째, 북중무역에 따른 개혁개방의 확대와 이로 인한 북한당국의 경제정치적 내부 통제력 약화가 야기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중무역의 확대와 병행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북한 내 중국투자자산의 보호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조치가 될 것이다.) 셋째, 북한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달러 규모의 감소와 이로 인해 북한 지도부의 통치역량 역시 약화될 것이다. (북중무역에서 지속적 적자를 보는 북한당국으로서 현금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독점에 따른 북한 경제주체들의 불만 가능성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현재 광산물 등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 가운데 일부는 동종상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수입가에 크게 못 미치는 헐값으로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상품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수요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바, 중국의 대북지원 증대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만연할 경우 북한 내부의 경제주체들에 의한 불만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정세

선거 결과 브리핑

1. 지방선거 결과 언론 보도

<한겨레>

1) 박빙지역 열기 투표율 높였다

투표율 15년만에 '최고' ...강원·경남·제주 60% 넘어

교육감 선거까지 겹쳐 30~40대 학부모 몰린 듯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최고 투표율(54.5%)을 기록. 정치권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접전지역이 많았고 여야 지지층이 선거 막판 결집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번엔 전반적으로 접전지에서 투표율 상승을 이끌었다.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를 맹추격한 강원은 4년 전보다 3.6%포인트 높은 62.3%까지 치솟았고, 무소속 후보들이 박빙승부를 벌인 제주도 60%대(65.1%)로 올라섰다. 정부의 세종시 원안 폐기가 쟁점으로 떠오른 충북(58.8%)과 충남(56.5%), 이달곤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접전을 펼친 경남(61.9%)이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투표율이 50%대 중반까지 이른 것은 아무래도 정권 견제심리가 있는 젊은층의 투표가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와 대통령 담화가 끝난 뒤 북풍에 대한 역풍이 조금씩 일어나 자발적 정권견제론이 다시 살아났고, 접전지역도 늘어나 젊은 야권 지지층이 투표를 해도 되겠다는 심리가 생겨 투표율이 높아지는 상승작용이 일어난 것 같다” 고 풀이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천안함 정국을 거치며 정권 심판 욕구를 지닌 유권자뿐 아니라, 보수 지지층의 투표율도 소폭으로 동반상승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권 성향 젊은층의 경우 (야당이 여당 후보와) 격차가 벌어져 있으면 사표가 될 것 같아 보통 투표를 하지 않는데 이번엔 박빙 지역이 많다 보니 투표장으로 간 것 같다” 며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이완됐던 보수 지지층도 천안함 침몰 이후 국정안정 심리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간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여기에도 교육감 선거가 겹쳐 교육문제에 민감한 30~40대 학부모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들였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정치권에선 야권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더 발길을 옮긴 것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방송 출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본다면 야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장으로 나온 것 같다” 고 말했고,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도 “점심을 넘기며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젊은층이 투표장으로 몰린 결과” 라고 평가했다.

2) ‘밀바다 정서’ 는 북풍에 흔들리지 않았다

선택 6·2 민심

‘MB정부 불신’ 젊은층들 투표장으로
송영길·안희정·이광재 등 40대 ‘약진’
당·청, 세종시 강행 등 차질 불가피

침묵은 분노였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굳게 다물었던 입들이 2일야야 비로소 ‘심판’ 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런 외침은 천안함 사건이 4대강, 세종시, 무상급식 등 모든 선거 쟁점들을 두 동강 내버린 상황에서 나왔다. 또 신문·방송들이 모두 한나라당 대세론을 얘기해, 민주당 등 야권 지지자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었고, 심판의 욕구는 높았던 셈이다.

천안함은 선거 흐름을 두 번 틀었다. ‘한명숙 무죄판결’ 로 야권의 기세가 오를 차례였으나 천안함 사태로 꺾였다. ‘유시민-김진표 후보단일화’ 효과도 뒤이은 천안함 수사결과 발표로 사그라들었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한명숙 지지도 차이가 천안함 정국을 거치면서 20% 이상으로 벌어지자, 여의도 정가에서는 “선거는 이미 끝났다” 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뒤, 여의도가 뒤집혔다. 2일 밤 12시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이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두 곳을 쓸었고, 충남·충북·강원·경남 등에서 앞서 9곳을 앞선 반면, 한나라당은 5곳에서만 선두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심판론은 젊은층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더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광진구의 경우 오후 2~4시에 투표율이 10% 이상 급등했고, 거의 다 젊은층” 이라고 말했다. 강원택 송실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쟁 불사론이 20대의 불만에 불을 질렀다” 며 “20대는 당장 전쟁터로 불려나갈 세대로 전쟁에 가장 민감하다” 고 말했다. 천안함 북풍이 거꾸로 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심판론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파놓은 골을 따라 거세게 불었다. 한명숙 후보의 뜻밖의 선전이 돋보였고, ‘좌회정 우광재’ 는 개표 초반부터 일찌감치 앞서가기 시작했으며, 김두관 후보가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시민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뒤진 것은, 유 후보가 전통적 민주당 표를 충분히 흡수하기에는 과거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또다른 특징으로는 세대교체의 바람을 들 수 있다. 인천 송영길(47), 충남 안희정(45), 강원 이광재(45) 후보가 모두 40대다.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고전한 안상수, 박상돈, 이계진 후보는 모두 60대로, 젊음에 밀린 것이다. 새로운 정치와 변화를 갈망하는 정서가 그만큼 광범위하다는 방증이다. 또 충남, 강원 등지에서 자기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을 키워보자는 정서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 결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애초 세종시 수정안 강행, 개헌 쟁점화 등 정국 주도권을 쥐려 했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대선과 총선으로 이어진 길고 긴 패배의 터널에서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잘해서 얻은 소득이라기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 또한 분명해 보인다.

<레디앙>

민노당 수도권 기초단체장 2곳 배출

민노 "야권연대 위대한 표심"...진보 "고군분투, 거름될 것"

울산광역시의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 전라남도의 박응두 민주노동당 후보, 대구광역시의 조명래 진보신당 후보가 10% 선을 넘겼을 뿐,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5%미만을 기록했다.

-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후보는 3.26%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46.84%로 두 후보 간 차이가 불과 0.6%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에서 노 후보의 득표를 캐스팅 보트로 읽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득표율이다.

- 인천에서는 99.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김상하 진보신당 후보가 1.85%를 기록했다. 개표가 완료된 대전에서는 김윤기 진보신당 후보가 1.53%에 그쳤고, 충북에 출마한 김백규 진보신당 후보는 2.86%, 경북에 출마한 윤병태 민주노동당 후보는 5.6%를 기록했다.

- 반면 전라남도에서는 박응두 민주노동당 후보가 10.9%를 기록하며 선전했고, 대구에서도 조명래 진보신당 후보가 10.2%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 양 당이 중복출마한 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에 앞섰다. 장원섭 민주노동당 후보와 윤난실 진보신당 후보가 출마한 광주에서 장 후보는 7.53%를 기록했고, 윤난실 후보는 5.89%를 기록했다.

- 역시 김창현 민주노동당 후보와 노옥희 진보신당 후보가 출마한 울산에서는 김창현 후보가 29.25%를, 노옥희 후보가 9.48%를 기록했다. 하연호 민주노동당 후보와 염경석 진보신당 후보가 출마한 전북에서는 하 후보가 6.3%, 염 후보가 4.28%를 기록했다.

-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 북구청장을 탈환했을 뿐 아니라, 인천에서 동구청장과 남동구청장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울산 북구에서는 윤종오 민주노동당 후보가 56.44%를 기록해 43.55%에 그친 한나라당 류재건 후보에 크게 앞섰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배진교 민주노동당 후보가 54.98%로 45.01%의 최병덕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인천 동구에서도 조택상 민주노동당 후보가 41.52%로 38.99%에 그친 이흥수 한나라당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은 수도권 최초의 진보단체장 2곳을 확보하게 되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번 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 당시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국민들께서 하지 말라는 4대강 밀어붙이고, 우리 학부모 간절히 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못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명한 중간평가”라며 “지방

권력에 1당 독식 구조를 깨고 권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과 시대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본다” 고 평가. “야당은 팔과 다리를 자르는 고통을 겪으며, 야권단일후보를 만들었고, 국민적 염원과 시대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해, 결국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위대한 표심으로 결과를 낸 것” 이라며 “우리가 단체장 사퇴를 많이 해 민주노동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과 진보정당으로서 정체성과 색깔 보이는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입술과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야권단일화에 앞장섰다” 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 대해 “높은 투표율은 이명박 정권 심판의 의지를 확인해준 것이며, 또한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국민들의 이명박 정권 견제심리를 확인해주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세력,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내세웠던 민주당과 전 정권 세력, 이 거대세력 사이에서 진보신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를 지켜내고, 진정한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다” 며 “진보신당의 고투는 장기적으로 국민을 위한 진보정치의 새싹을 키우는 큰 거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민중의 소리>

반MB연합이 천안함 늘렸다

민심, '이명박 정부에게는 준엄한 심판, 야권에는 더 높은 단결 주문'

<참세상>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격랑 속으로, 민주노동당, 7월 당대표 선거가 분기점

진보신당, 당 존폐위기...7월 전국위원회에서 수습방안 마련 할듯(홍석만 기자)

6.2지방선거 결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은 큰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반MB연합이 나름의 위력을 보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명분만큼 얻은 것이 없다. 선거평가를 둘러싸고도 내부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7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가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신당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좌충우돌식의 선거운동으로 당원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내부 입장차가 워낙 커져 통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동당과 분당 이후 진보신당은 당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프레스안>

'강남 3구', 서울 민심을 비틀다한명숙, '선거 혁명' 문턱에서 좌절

- 야권연대를 거부, 독자노선을 고수한 진보신당과 노회찬 후보는 '진보 탈레반'의 명예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마이>

서울-경기 건졌지만, 한나라당 '참패', 한 6, 민 7, 무 2곳 승리...'MB정권' 심판

- 오세훈 '기사희생'... 이광재-안희정-김두관 '친노 부활'

<조선>

1) 한나라당은 4년 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었다. 한나라당은 당시 서울시장·경기지사·인천시장 등 수도권 3곳을 모두 이기며 16개 시·도지사 중 12곳에서 승리했다. 시장·군수·구청장 230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서울 구청장 25곳을 싹쓸이하는 등 호남을 뺀 전국 기초단체장의 82%를 차지했다. 이어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역대 대선 사상 최대 표 차이로 승리했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의 강세는 이어졌다. 지난 수년간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의 선거 성적표와 비교하면 6·2 지방선거 결과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완패(完敗)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 정권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고, 과거 정권들도 임기 중반의 선거에

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였던 것은 지난 두달여 동안 천안함 침몰 사건이 국가적 최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다른 정치 이슈들이 묻혀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표심은 결국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와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 쪽으로 크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4년전 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던 25개 서울 구청장 중 5곳에서만 우위를 보였고, 나머지 20곳은 민주당 후보가 앞서갔다. 한나라당은 다른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2) [사설]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民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民心)의 호된 평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줬던 국민은 집권 여당이 주류와 친박으로 갈려 싸움을 벌이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 여권(與圈) 주류는 지난해 가을부터 세종시 수정 문제를 밀어붙였으나 당내 친박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껏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간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진두지휘하면서 승리를 이끌어 온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끝내 지원유세에 나서지 않았다. 또 박 전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도 고전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처음에는 박 전 대표의 지원을 요청하는 듯하다가, 여론조사 결과가 한나라당 강세로 나오자 박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여권이 이같은 고질적인 내부 분열과 갈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임기 후반의 국정 운영은 물론 앞으로 있을 다른 선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등에서도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현 여권은 임기 초부터 스스로 "국민과의 소통(疏通)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임기 중반이 다 되도록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이 현 정권에 기대했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목적 의식과 비전을 분명히 보여줬느냐 하는 점이다. 경제 실적주의에 매달려 정작 민심의 흐름과는 멀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들어 새로운 정치의 영역으로 등장한 인권·환경·여성 분야를 좌파의 전유물로 넘겨줬고, 경제·노동·교육 문제에서도 건강한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여권이 이번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 변화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성패도 갈릴 것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나 이번 선거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훨씬 나은 성적을 거뒀다. 전국선거 연패(連敗)의 사슬을 끊었고, 취약지역인 강원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영남에서도 선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천안함 사태 대응에서 보여준 모습은 10년 집권의 경험을 가진 대안(代案) 야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또 경기도 지사에는 친노(親盧) 신생 정당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패해 제1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 곳은 대부분 민주당 주류라고 보기 힘든 친노 성향의 후보였다. 민주당은 야권(野圈)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 정당으로 완전히 자리잡고 수권(受權) 정당의 면모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려온 영남과 호남에서 무소속 또는 군소 정당 후보들의 도전이 거셌다. 또 한나라당 광주시장과 전북·전남 도지사 후보가 1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2 선거는 기성 정당에 보내는 국민의 공개 경고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동아>

與 예상밖 참패... 민심은 정권을 견제했다

광역단체장, 한나라 5 대 민주 7... 與 수도권 기초단체장도 완패
지방선거 승부 가른 6가지 요인

- ① 천안함 北風이 與에 역풍으로
- ② 방심한 보수층... 젊은층은 결집

- ③ 지방선거 與패배 징크스 확인
- ④ 다시 분 盧風... 친노세력 부활
- ⑤ 충청민심 세종시 수정안 거부
- ⑥ 진보세력 ‘교육감 단일화’ 위력

2. 교육감 선거

부패교육에 지친 국민들, 6명의 진보 교육감 탄생시켜
 “깨끗한 교육으로 보답하겠다”

16개 지역의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총 6명의 진보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다.

당선된 진보 교육감 후보로는 서울의 박노현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를 비롯하여 광주의 장휘국, 경기도의 김상곤, 전라북도의 김승환, 전라남도의 장만채, 강원도의 민병희 후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 종료까지 피말리는 접전이 계속되었다. 박노현 당선자의 경우,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1% 내외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라북도의 김승환 당선자 역시 오근량 후보와 접전을 거듭했다.

반면 이청연 인천 진보 후보는 보수 나근형 당선자와 접전을 벌이다 0.3%의 차이로 낙선하기도 했다.

전남에서 교육감으로 당선된 장만채 당선자는 당선 후 “지지와 성원 잊지 않고 반드시 깨끗한 교육, 발전한 전남 교육으로 여러분들과 아이들에게 보답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정희상 선거대책본부장은 당선 원인에 대해 “그동안 비리로 얼룩진 전남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전남 학부모들의 마음이 정만채 후보로 나타난 것 같다” 고 전했다.

강원도 교육감의 경우,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후보가 교육감 3선에 도전하는 한 장수 현 교육감을 제치고 당선됐다. 민병희 당선자는 당선 원인에 대해 “정책에 도민들이 열망하는 내용을 담았고 그 정책을 설명하는 토론회 등에서 진정성을 확인한 것이라 판단한다” 고 분석했다.

그는 취임후의 계획에 대해 “가장 먼저 고교평준화부터 시행할 것” 이라면서 “아울러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학생인권조례 제정들도 함께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 교육감 당선자 역시 전교조 광주 지부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전교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전교조 출신인 나를 선택한 것” 이라면서 “광주에서 핀란드를 뛰어넘는 교육혁명을 이룰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승환 당선자는, 초반부터 오근량 후보와 접전을 계속하다 0.3%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그는 근소한 표 차이에 대해 “자만하지 말고 교육개혁을 잘하라는 도민들의 뜻” 이라고 말하며 “여러 난관이 닥치겠지만 그때마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 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현 경기도 교육감인 김상곤 후보는 42.3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무난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임기동안 진행 해 왔던 ‘혁신학교’ 설립 등의 기존 추진 정책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의 ‘수도권 혁신교육 벨트’ 체결을 토대로 수도권 전역에서 혁신학교의 설립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진보 교육감들의 선전은 그동안 보수 세력들이 주도했던 부패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의 증가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서민층의 교육의 소외가 확대되면서,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전교조 대량해고 사태도 선거판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교조 대량 파면, 해임 조치는 오히려 전교조 역풍이 되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교육감 6명을 당선시킨 국민들은 부패교육이 혁신교육으로 변화 될 한국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3. 당선현황

정당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
한나라당	6	75	254	36
민주당	7	91	326	32
자유선진당	1	13	38	3
민주노동당		3	18	6
진보신당			3	
국민중심연합		1		
국민참여당			3	2
미래연합		1	1	
친박연합			1	2
무소속	2	36	36	

역대 선거 정당 득표율

(단위: %)

구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비고
2002. 6. 13 지방	8.1		
2004. 4. 15 총선	13		
2006. 5. 31 지방	12.1		
2007. 12. 19 대선	3.0		
2008. 4. 9 총선	5.68	2.94	
2010. 6. 2 지방			

제4회 지방선거 현황(2006. 5. 31) 정당별 득표율

구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	기초의원	기초비례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열린우리당	27.1	23.1	23.7	21.6	19.3	24.1
한 나 라 당	55.2	50.8	50.8	53.8	45.4	54.0
민 주 당	9.1	8.3	8.8	9.9	8.6	10.3
민주노동당	5.8	3.5	2.8	12.1	5.9	9.5
국민중심당	1.8	2.2	2.2	2.3	2.1	2.2
시 민 당	-	-	-	-	-	-
한 미 준	-	-	-	-	-	-
희망사회당	-	-	-	0.2	-	-
무 소 속	0.9	12.2	11.7	-	18.6	-

진보정당 출마 현황

구분	제4회 5.31지방선거		제5회 6.2지방선거					
	민주노동당		소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출마	당선	출마	당선	출마	당선	출마	당선
광역 단체장	13		15/13		6/5		9/8	
광역 의원	97	5	99		73	18	26	3
광역 비례	42	10	55		33	6	22	
기초 단체장	56		32/31		25/24	3	7	
기초 의원	467	52	312		224		88	
기초 비례	127	14	114		91		23	
계	802	81	627/624		452/450		175/174	

4. 선거 쟁점

전국적 선거 쟁점 : 4대강 · 무상급식 · 세종시 · 대북 대응 (경향, 6/1)

-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및 심판 의미를 지닌 만큼 결과에 따라 4대강, 세종시 사업 등 현 정부 핵심정책이나 쟁점들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그런 만큼 ‘천안함 정국’ 등이 선거판을 압도하는 와중에도 쟁점들에 대한 물밑 논쟁은 지속됐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사업을 매개로 북풍에 가라앉은 정권심판론을 점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 반면, 한나라당은 10대 공약에서 4대강을 제외하는 등 논쟁을 피했다.
- 여야 복지정책을 가르는 쟁점인 초·중등학교 급식과 관련, 야당은 ‘전면 무상급식’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부분 무상급식’으로 맞섰다.
- 세종시는 대전·충남 등 충청권 선거에서 핵심 이슈이고, 야권의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원안)과 여권의 ‘행정효율성’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철학이 맞부딪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미쳤다는 평가다.
- 천안함 침몰은 당초 여권이 대북 강경조치 등 ‘안보’를 부각하면서 정책의제와 정권심판론 등을 희석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여야간 ‘전쟁이나’ ‘평화나’의 논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16개 시·도별 선거쟁점 원가(경향, 6/1)

일자리 창출... 여는 “개발 통해” 야는 “사회서비스로

-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살리기가 대구·경북·부산·울산·충남·강원·제주 등 7곳에서 쟁점으로 선정됐다. 한나라당 후보들이 지역개발 등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차별화되고 있다.
- 우선 서울·수도권의 경우 무상교육·보육, 서민주거 등 ‘복지’ 문제가 쟁점의 화두였다. 서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한나라당)의 ‘경제활성화’론에 대해 한명숙(민주당), 노회찬(진보신당) 후보는 생활복지 일자리, 일자리 나누기를 제시했다.
- 경기도는 여야의 지사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한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한나라당)의 미분양아파트 장기전세 활용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이 논쟁거리다.
-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인천의 재정 위기가 논쟁점이다. 전영우 인천대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만 짓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 인천시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광주·전남·전북권은 LH공사 이전, 광주공항 이전, 영산강 사업 등 지역개발 문제가 앞섰다. 광주의 경우 ‘MB(이명박 대통령)정권심판론’에 대해 정용화 후보(한나라당)가 민주당 권력 견제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역부족이다. 전남은 4대강 문제가 부각됐지만, 여야 후보 모두 영산강 사업에 대해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은 주택·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생겨난 LH공사 이전을 놓고 진실 공방의 상황이다. 정운천 후보(한나라당)가 LH공사의 일괄 배치를 공약했지만, 정작 한나라당 지도부는 경남 진주에서 LH공사 본사 유치를 공약하면서다.
- 충남은 세종시 ‘원안 대 수정안’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원안 사수’를 앞세운 안희정 충남지사 후보(민주당)가 TV토론을 통해 부상하는 양상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 대전은 염홍철 후보(자유선진당)가 제기한 서남권 조기 개발 문제를 놓고, 충북은 금강 유역의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갈려 있다.
- 대구·경북은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핵심이다. 지역 경제의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탓이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한나라당 후보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야당 후보들은 분배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각각 편향돼 있다”고 분석했다.
- 부산·울산·경남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지긴 마찬가지다. 부산의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허남식 부산시장 후보(한나라당)의 대형사업 위주 공약에 대해 김정길 후보(민주)는 시민 생활에 와닿는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소상공인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녹색 산업이나” (박맹우 한나라당 후보), “사회서비스 산업 확대나” (김창현 민주노동당)는 신성장 동력의 방식을 둘러싼 대립이 핵심 쟁점이다.
- 경남은 진주 혁신도시 추진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달곧 경남지사 후보(한나라당)가 ‘친박’ 표심을 겨냥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내세워 논쟁이 붙었다.
- 강원지사 선거는 ‘특별자치도를 통한 일자리나’ (이계진 한나라당 후보), ‘복지 확충식 일자리나’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논쟁이 최대 쟁점이다. 제주의 경우 특별자치도로서 제주 경제 살리기 방안이 현안인 가운데 시·군 기초단체장 부활을 놓고 후보간 차별점이 보인다.
- 하지만 영·호남의 경우 전통적 지역구도에 간히면서 정책적 차별화가 부각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조정관 교수(전남대), 김규원 교수(경북대) 등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후보가 일방 독주하는 과거 선거 구도가 변하지 않으면서 “정책공약 대결이란 선거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 여론조사, 왜 빛나갔나

6·2 지방선거 투표 결과가 공개되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안타까운 탄성을 내질려야 했다. 선거 전 여론의 ‘압승’을 예상했던 전망치가 완전히 빛나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먼저 여론조사 방법의 ‘기술적 약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예측 결과가 틀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더피플’의 육창균 조사팀장은 “이번처럼 판세 예측이 어려운 적은 없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닥 민심과 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여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가 현장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무엇보다 신뢰도 높은 표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여론조사는 집전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손전화와 ‘070 전화’가 일상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사가 시행되는 시간에 집에 있는 경우가 드문 20~30대 젊은층의 샘플 확보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또 잦은 여론조사에 따른 ‘피로감’과 ‘의도적 조사거부증’의 증가로 응답률이 낮아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때 30%대에 육박했던 전화자동응답(ARS)조사와 전화면접조사의 응답률은 각각 5~10%, 10~15%대로 뚝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에 ‘견제론’의 불씨가 급속히 되살아났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사장은 “바닥에 두텁게 깔려 있었으나 천안함 침몰 사태에 묻혀 있던 견제론이 막판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여당의 과도한 ‘강경 북풍몰이’에 맞서 야당이 제대로 된 대응논리를 만들지 못하자 막판까지 주춤했던 유권자들이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투표일에 움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도 “특정 정당 편중이 심한 영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유권자들이 막판까지 확실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막판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 근거로 54.5%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 그중에서도 야당 성향이 강한 20~30대의 투표율 상승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 막판 경기도 유시민-심상정 후보의 단일화에 이어 방송인 김제동씨의 ‘외압 하차설’ 등이 전해지며 젊은층에서 여당 견제론이 살아나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변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거 1주일 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게 투표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발표가 여당 지지 성향 보수층의 결집을 느슨하게 한 반면에 야당 지지층의 견제심리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질 것 같은 후보에게 동정표를 몰아주는 일종의 ‘언더도그 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 노동

1. 총연맹

-없음

2. 금속노조

1) 금속노조 9일, 11일 경고파업

- 금속노조는 25일 5차 중앙쟁대위원회의를 통해 6월 9일과 11일 각각 4시간 경고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아울러 노조는 파업권 획득 사업장 다음달 7일부터 이번투쟁이 끝날때까지 잔업 특근 거부 투쟁을 펼치기로 함. 금속노조는 이 주간을 1차 총파업 총력투쟁주간으로 설정.

2) 경주발레오전장코리아 금속노조 탈퇴 및 경주지부 3시간 파업, 법원효력판결 무시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19일 발레오전장시스템(사측)이 2월16일부터 단행한 직장폐쇄에 대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렸음. 이후 24일 법원결정문을 받은 사측은 직장폐쇄 99일만인 25일 아침 8시부터 직장폐쇄를 철회.

- 그러나 25일 출근한 조합원들에게 사측은 ‘업무부여를 위한 현장배치 조정 이유로 25~31일까지 자택대기’ 공고를 붙였고 문자로 출근시도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을 함.

- 이러한 사측의 불법행위는 5월19일 사측의 비호아래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마저 갖추지 않고 진행된 소위 ‘금속노조 탈퇴 조합원 총회(조직형태 변경 총회)’의 결과가 노동부와 경주시청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경주시청은 불법총회에서 결성된 자칭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유보했음.

* 5월17일: 발레오노조 조조모(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모임) 정치부장 사측 회유

5월18일: 사측, 새벽 4시 경 식당에 조직변경총회 소집 공고 부착

5월19일: 조합원들 총회 전 회유당해 복귀(노조 사무국장, 조직부장 등 상집 회유) 조직변경총회결과 찬성 517표 반대 22표 기권 4표, 규약개정 투표결과 찬성512표 반대 20표 기권 9표, 임원선출 찬성487표 반대48표 무효 8표, 위원장, 사무국장에 사측 관리자 선출됨.

5월20일: 60여명의 조합원이 남아있었으며 지회임원들과 대화, 노조원 76명 현장복귀(회유 및 협박)

5월21일: 8명 다시 복귀

5월22일: 사측, 조합원 개별 접촉

5월23일: 사측, 호텔에서 복지축소, 상여금 50% 반납, 사원아파트 매각후 복지금 활용 워크숍 진행.

- 현재 현장 복귀 조합원들은 생계문제를 못 견뎌 억지로 회사의 회유를 받아드린 경우가 대다수임. 사측은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합숙시키며 수용소방식의 노동을 강요, 조합원 증언에 따르면 불법 총회 개표 이후 관리자들이 공공연하게 반대표를 찍은 조합원 색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함.

- 이에 경주지부는 노동탄압에 맞서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28일 3시간 파업을 단행하고 파업 출정식에 참여.

3) 금속노조 1백61곳 4만2천명 쟁의조정 신청

- 금속노조는 5월18일 지노위에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 보충교섭 및 대각선 교섭 의견불일치에 따른 쟁의조정을 신청함. 이날 조정신청을 넣은 지부는 경기, 대구, 부양, 서울, 울산, 충남지부 등이고 여기에는 한진중공업, 대우버스, 위니아만도, 현대제철, 두원정공, 케피코, 한국델파이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15만 금속노조 가운데 91개 사업장 1만8천여명 조합원은 31일부터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지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음.

4) 올해 임단협 개악안, 사측 도발

- 금속노조 각 단위 교섭에서 노골적인 노조 활동 축소를 요구하는 사측의 단협 개악안이 속출하고 있음. 기아차의 경우 전임자 한도를 18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으며 GM의 경우 5월7일 노조활동보장 및 전임자 처우와 관련, 단협 조항 삭제를 요구했음. 지역지부 단위사업장의 경우도 비슷함.

5) 주요 금속 일정

- 6월1일 4일: 2차 쟁의행위찬반투표 / 6월7일까지 노조 쟁의권 확보 / 6월9일 외투, 구조조정 투쟁사업장 집중집회 (권역별) / 6월7일 18일 1차 전체 총파업 및 지부별 총파업, 총력투쟁

3. 공공

1) 부산지하철노조 쟁의행위 가결

- 부산지하철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2%로 가결, 쟁의행위 조합원찬반투표 투개표 관리를 맡은 부산지하철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8시 40분에 재적 조합원 3398명 가운데 2816명(83%)가 투표에 참여해, 2014명(72%, 재적 조합원 대비 59%)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개표 결과를 발표.

2) 동덕여대 청소미화노동자 집단 해고

-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동덕여대분회 청소미화 노동자들이 5월 31일 재계약을 앞두고 집단해고 되었음. 원청인 동덕여대 당국은 실제 사용자의 지위에서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용역 계약을 통해 동덕여대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각종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일반적인 원하청 관계를 보았을 때 작금의 집단해고 사태는 원청인 동덕여대가 진두지휘했음이 분명함. 특히 청소미화 노동자의 숫자를 줄여서 계약하는 등 집단해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태를 벌인 것임. 아울러 신규 용역업체인 (주)대한안전관리공사는 노동조합과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집단해고를 강행하고 있음.

- 6월1일 동덕여대 노동자들은 동덕여대 사무처장, 교무처장, 용역업체 임원과 교섭을 벌여 청소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합의.

3) 운수노조 철도본부 찬반투표 가결

- 철도본부는 27일 마감된 조합원 총투표에서 76.65%의 찬성으로 인준투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합의내용은 노조간부 배치전환 시 협의대상 인원 종전 1409명에서 189명으로 줄이고 3년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조항 등을 삭제하는 것, 인사, 경영권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음. 근무평점 방법에 대한 노사협의 조항과 순직 유가족 특별채용도 없었고 징계위원회 의견진술인 참석 인수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음. 유급 휴일이던 한글날, 제헌절,

공사 및 노조창립기념일 등을 폐지, 청원휴가 31일에서 21로 후퇴, 퇴직휴가 60일에서 20일로 후퇴 등을 축소하고 장기 근속휴가도 없앴음.

- 3조2교대 근무를 업무 형태에 맞춰 다양하게 바꾸고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부당징계시 위로금 200%지급,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등의 조항을 삭제했음.

4. 기타 연맹

1) 공무원, 교사 정치활동 전면 해임 파임

- 5월23일과 26일, 정부는 여름방학부터 민주노동당 가입혐의 및 정치자금 납부 혐의로 현직 교사 134명과 공무원 83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함.

5. 기타

1) 어용노조 쌍용차지부 단협 합의

- 어용노조인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은 2010년 단체교섭 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79%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밝힘. 주요 합의안은 임금위임, 월차휴가폐지, 타임오프제운영(전임자 7.5명 축소), 이권개입 근절 및 불합리한 독소조항 폐지 등임.

5차 국가고용 전략회의

“2008~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과제”

· 일시 : 5월 12일

1. 의의 및 경과

○ 의의

- 1) 경제 전체의 인력수요와 공급을 비교, 학력수준별, 산업부문별 수급 전망 및 불일치 부문 파악
- 2) 단기적으로 구직자의 직업선택에 도움, 중기적으로 재학생의 직업진로 설정과 대학·학과의 정원 조정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가이드라인 역할(경제전체적으로 과잉 교육투자를 예방)
- 3) 성장산업과 쇠퇴산업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쇠퇴산업의 퇴출인력을 성장산업으로 원활하게 중개하는 방안을 강구(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도 1~5년 주기로 인력수급전망을 발표중)

○ 경과

- 1) 고용정책기본법¹⁾ 노동부 주도하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수급전망을 추진
- 2) 총량전망(노동부)과 부문별 전망(각 부처)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국가인력수급전망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수급전망
- 3) 한국고용정보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 10개 연구기관*²⁾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

2. 2018년까지 전망결과

1) 노동공급 전망

① (총량 전망)

- 1)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인력의 수급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공표토록 규정
- 2) 직업능력개발원(과학기술),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협회(방송통신), 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문화콘텐츠), 환경산업기술원(환경), 보건사회연구원(보건의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경제성장 및 자문)

- 인구증가율은 둔화하나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는 '18년까지 지속 증가('08년 39,598천명 → '18년 42,605천명)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지속 증가('08년 24,303천명 → '18년 26,475천명)
- <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단위 : 천명, %)

구 분	2008	2018	증감*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39,598	42,605	0.7%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24,303	26,475	0.9%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61.4	62.1	0.7%p

*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감분을 의미

② (노동력 고령화 심화)

-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15~29세)·중년층(30~44세)은 감소, 고령층(55세 이상)은 증가
- 고령층은 연평균 284천명 증가하여 그 비중이 '08년 18.0% → '18년 27.2%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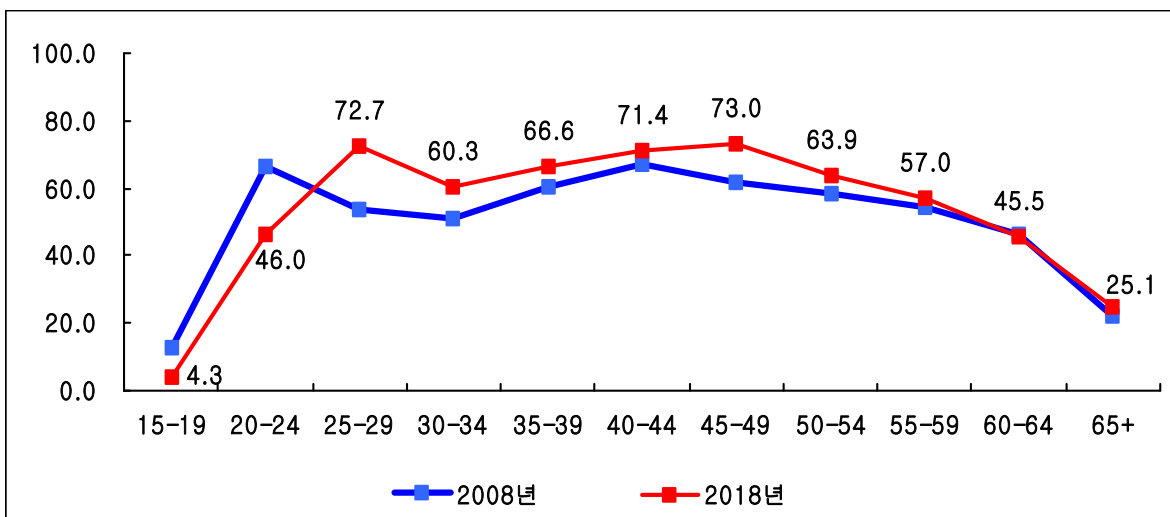
③ (노동력 고학력화 지속)

-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상승*으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중 증가('08년 36.8% → '18년 44.0%)
- * 대학진학률 : '93년 38.4% → '98년 64.1% → '08년 83.8%
- 연평균 경제활동인구 증가분 217천명 중 전문대졸이상은 270천명, 고졸은 32천명 증가하는 반면, 중졸이하의 85천명 감소

④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8%p 상승 전망('08년 49.9% → '18년 51.7%)
- 특히 30~34세 여성의 경력단절이 점차 감소하여 경제활동참가율 대폭 상승 전망('08년 53.2% → '18년 60.3%)
- * 연평균 경활인구 증가율은 여성이 1.1%로 남성(0.7%)보다 높을 전망

< 여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



2) 노동수요 전망

① 총량 전망

- (취업자수) 연평균 208천명(0.8%) 증가('08년 23,577천명 → '18년 25,659천명)
 - * 고용률(15세 이상 기준) : 59.5%(' 08) → 58.6%(' 09) → 60.2%(' 18)로 0.7%p 상승
- (산업별 고용구조) 농림어업(7.2%→4.8%), 제조업(16.8%→14.7%), 건설업(7.7%→7.5%)은 감소, 서비스업(67.7%→72.5%) 비중은 증가
 - * 주요 선진국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 08년) : 미국 79.5%, 영국 78.0%, 일본 68.9%
 - 서비스업 내에서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4.1%→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6%→5.4%) 취업자 비중은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8.7%→7.7%), 도소매업(15.4%→12.9%) 취업자 비중은 감소

② 산업별 취업자 전망(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75개 업종 대상)

- (증가산업) 기업관리업무의 아웃소싱 확산,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8.3%), 사회복지서비스업(7.4%), 통신업(6.7%) 등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
- (감소산업) 전통제조업 퇴조, 농업인구 감소 등의 추세가 지속되어 의복 관련 제조업(△9.7%), 섬유제품 제조업(△7.1%), 농업(△2.9%)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

③ 직업별 취업자 전망(고용직업분류 소분류 : 138개 직업 대상)

- (증가직업) 복지가사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금융보험업의 성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4.9%), 통신 및 방송 장비기사 및 설치수리원(4.4%), 금융·보험 관련 전문가(4.2%) 등이 크게 증가
- (감소직업) 산업고도화, 인터넷 쇼핑 증가,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5.5%), 작물재배 종사자(△2.3%), 판매원 및 상품 대여원(△1.5%) 등이 많이 감소

3) 미스매치 전망

① (학력수준별 신규 수요·공급 전망³⁾) 전문계고 및 대학원 졸업자는 전반적으로 수급균형 유지.

-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는 연간 약 45천명 수준의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심화시킬 전망 (초과공급 : 전문대 연 28천명, 대학 연 17천명)

② (대학입학인구 전망) 2차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 16년까지는 고교 졸업자가 대학입학정원보다 많은 상태 유지

-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아 하향취업 등 청년고용 악화 원인을 제공(대학진학률(' 07년) : 미국 65%, 일본 46%, 한국 83%)
- ' 16년 이후 학령인구(전년도 기준 만 18세 인구)가 급감하여 대학정원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 23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20만명 가량 부족

③ 부문별* 신규인력 수급 전망⁴⁾

- 과학기술,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금융, 산업기술, 방송통신, 관광, 환경 등 8대분야
 - 전문대 및 대졸수준의 인력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가운데, 정보·통신, 언론·방송 등의 계열은 15% 이상 초과공급(잉여인력) 발생
 - 대학원 인력은 의약계열, 전산컴퓨터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15% 이상 초과수요(인력부족) 발생
- 전자공학, 전산컴퓨터, 콘텐츠창작, 간호학, 약학, 치료보건 분야 등

3. 대응과제

3) 현재의 인력수요·공급과는 관계없이 25~29세 기준 향후 10년간의 신규인력의 수요·공급을 비교

·신규공급 = 졸업생 중 경할참가자 + 졸업생 이외 재진입자 - 실직·퇴직·사망자

·신규수요 = 성장수요로 인한 일자리 증가

4) 경할조사의 학력정보가 계열별로만 조사되고,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의 표본수가 적어 학과별, 세부 산업·직종별 전망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결론

◆ 노동력의 고령화·고학력화 지속,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 심화 등으로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될 우려
 ⇒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통한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교육개혁, 고용률 제고, 일자리증대기능 강화 등의 노력 필요

1)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을 위한 대학구조조정 강화

① (대학 학과정원 조정 강화) 산업수요와 졸업생 취업률 등을 고려하여 초과공급이 예상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

·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계약학과 확산을 지원하고 학사제도 개선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② (대학 구조조정) 대학 통폐합, 퇴출 등을 통해 초과공급되는 대졸인력 조정

· 국립대학은 대학간 통폐합 또는 대학간 연합을 통한 법인화 유도

* ('05~'09년 실적) 18개 국립대학을 9개로, 2개 공립대학을 1개로 통합하여 총 8,764명의 입학정원 및 103개의 학과·학부 감축

· 사립대학은 경영진단과 실태조사를 기초로 경영부실 판정 또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통폐합, 퇴출 등 단계적 구조조정 추진

* 경영부실 8개교, 경영개선 필요 4개교는 컨설팅 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중

* 자율적 퇴출 유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제출(해산시 잔여재산 출연 허용)

③ (상시적 구조조정 기제 마련) 외부 평가인증기관 인정제 실시 등 대학평가 강화, 대학정보공시제 내실화*, 교육여건과 구조조정 실적을 정부의 각종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 강화 등 추진

2) 서비스업 중심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

① (일자리 증대기능 강화) 원활한 산업·직종간 이동(mobility)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가 가능하도록 취업지원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

* 민간고용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의 취업지원 역량 최대한 활용

②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flexibility) 확대 및 취업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여 변화 대응능력(adaptability) 제고

③ (서비스업 고용의 질 개선) 서비스업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병행하여 질적 수준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전문화를 통해 고용구조 고도화

3) 노동력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정책 강화

① (고용률 제고) 노동력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에 대비하여 OECD 수준으로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용대책 추진

* 고용률(15~64세 기준, '08년) : 덴마크 78.4%, 미국 70.9%, OECD 평균 66.5%, 한국 63.8%

② (비경활인구 감축)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극복 노력 강화,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 유희인력(NEET족 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을 통해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유입 확대

③ (고령자 고용연장)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 도래로 숙련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자 고용연장 대책을 마련하되,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병행 추진

4)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① (고용친화적 산업 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고용친화적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

② (성장분야 육성) 녹색일자리, 사회복지서비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등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인력양성 강화

③ (고용창출 기업 우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세제, 금융, 정부포상, 홍보 등 우대 지원

4. 추진과제

1) 인력수급전망 결과 보급·활용

- (고용서비스 제공시 활용) 전망결과를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직업훈련기관에 보급하여 고용서비스 제공시 활용토록 유도하고, 정부의 일자리정책 기초자료로도 활용
- (직업진로교육) 초·중고 학생 등의 직업진로교육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관계자 교육 실시

2) 인력수급전망의 질적 수준 제고

- (전망 세분화) 현행보다 세밀한 전망이 가능하도록 산업별 소분류·직업별 세분류 수준까지 전망 추진
 - 인력수급전망의 기초가 되는 지역별 고용조사확대('09년 연 1회 → ' 11년 연 4회), 학력 등 설문문항 세분화
- (종합적 직업정보 제공) 직업전망(200여개 직종)과 중장기인력수급전망을 연계하여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과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미래유망직업을 체계적으로 제시
- (지역별 인력수급전망) 지역일자리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 10년에는 5대 권역별 인력수급전망 실시 → '11년 이후 세분화된 지역별 전망 추진 * 5대권역 :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 (미스매치 전망 강화) 노동시장 빈자리 정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산업별·직업별 인력미스매치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공 *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연 2회), 사업체고용동향조사(매월) 활용

3) 정책적 대응과제는 『국가고용전략』에 구체화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 등을 반영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 수립 추진 중
 - * 전문가 합동 연구작업반 활동 및 노사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6월말까지 안을 마련,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상정하여 확정

<끝>